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99
----------	------

발의연월일 : 2025. 3. 24.

발 의 자 : 윤건영 · 한병도 · 이광희
채현일 · 모경중 · 양부남
위성곤 · 이해식 · 박정현
신정훈 · 김성희 · 이상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구당이 폐지됨. 지난 20여 년간 시·도당이 지구당의 역할을 맡았지만, 기초 단위인 국회의원 지역구 내 당원 활동의 법적 근거가 보장되지 않아 당원을 조직하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음.

현재 지역 정당 조직은 당원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무소 설치가 제한돼 당원 간 상시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이 악화 되고, 모든 상시적 정당 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임. 더불어 원외 인사와 원내 현역 정치인과의 불평등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50명 이상의 당원으로 지역당을 구성해

정당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을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로 한다.

제6조 중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를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시·도당의 창당승인)”을 “(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시·도당의 법정당원수)”를 “(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를 “시·도당은 1천명 이상의, 지역당은 50명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당의 관할구역”을 “시·도당 및 지역당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 ----- ----- <u>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u> 및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이하 “지역당”이라 한다)-----.
제4조(성립) ① (생 략)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u>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u> 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8조(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정당원수)</u> -----.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u>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u>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발기인) ----- ----- -- <u>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지역당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의</u> -----.
제9조(<u>시·도당의 창당승인</u>) <u>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u>	제9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창당승인</u>) <u>시·도당 및 지역당</u> ----- -----.
제18조(<u>시·도당의 법정당원수</u>)	제18조(<u>시·도당 및 지역당의 법</u>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생략)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명 이상의, 지역당은 50명 이상의
-----.

②-----

----시·도당 및 지역당의 관할구역-----.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p><u>둔 자</u></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	-------------------